

+ 이창형 · KBS TV기술국 기술감독

##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지원이 시급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 국가 경쟁력의 추락과 시청자에 대한 방송 복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방송발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유발효과가 143조로 파급효과가 크다. 그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대한 정책건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런 의견에는 귀를 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2013년부터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일정이 결정됐다. 그러나, 특별법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새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홍보예산을 46억원에서 13억원으로 60% 이상을 삭감하고, 국회는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방송 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만들었다.

국회에서 마련된 특별법에는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예정됐다. 그러나,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후속조치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준을 절감하는 결과이다. 특별법에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계획,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정의 홍보, DTV 수상기와 관련 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지원,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 하드웨어 투자 못지않게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가전매장에서 아날로그TV를 구매하는 국민들이 수십만이다.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디지털 전환 일정을 소상하게 홍보하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정책은 국가적인 핵심 정책과제다. 영국,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세계의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디지털TV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및 스웨덴 등은 이미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했고, 디지털 전환 중인 나

지 국가들도 전환 일정에 맞춰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예정이다.

영국과 미국 등의 디지털 전환 과정은 정부 당국이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으로 손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디지털 전환 일정이 비슷한 영국은 전환율이 90% 이상 진행됐다. 미국의 경우도 금년 6월 12일에 디지털방송을 전면 실시하기 위한 전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전환 일정이 3개월 연기되기는 했으나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율은 어떤가? 겨우, 30%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은 불가능하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세미나'에서도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율이 70%를 넘기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책당국의 안이한 정책추진이 가져온 결과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에 1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2조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할 실정이나, 갈수록 황폐해

지고 있는 방송환경에서 투자 자원마련에 바상이 걸린 상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책당국이 디지털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 여당은 IPTV 도입법안과 미디어관련 법안들의 개정에는 강행 처리를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DTV코리아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방송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런 노력에도 가전사들은 디지털 전환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DTV코리아에 가입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국회 문광위에서는 디지털방송 전환 촉진 특별법이라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솜등을 조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 국가 경쟁력의 추락과 시청자에 대한 방송 복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방송발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 유발효과가 143조로 파급효과가 크다. 그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대한 정책건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런 의견에는 귀를 열지 않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DTV 전환 시나리오 연구반을 구성하여 디지털 전환 준비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지만 다행이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디지털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